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박귀천 (요한볼프강괴테대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해 독일 노동시장은 건국 이래 최고의 실업률 기록이라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하르츠IV 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 및 사회복지 개혁 정책은 각 계 각층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린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 실시 결과 기독교민주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을 이루어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는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해를 마감하고 2006년을 맞게된 독일의 경기 전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경기, 노동시장 전망

정부의 경기, 노동시장 전망¹⁾

정부가 2006년 1월 25일 발간한 “2006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06)”에 의하면 2006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연평균 실업자수가 전년도보다 약 3십 5만명 감소된 4백5십1만명 선으로 줄어 실업률은 전년도 11.7%에서 10.9%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정부는 200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약간 높아진 1.4%로 예측하였다. 연방통계청의 잠정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었다.²⁾

정부는 현재 독일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 상승기류 속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경제의 강세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경제, 내수증가 등에 의해 경기회복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한다.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가 현행 16%에서 19%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올해 가전제품과 같이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부가가치세 인상 전에 구매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고 특히 올해는 독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내수 증가도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월 9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경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교통, 연구, 기술, 재건축 등을 위해 25억 유로가 투자될 것이고 개인수공업자들에 대한 세금면제, 기업의 감가(減價, depreciation) 조건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³⁾ 2006년도 수출은 6.5%, 수입은 5.5%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수요는 0.7%, 가계지출은 0.3%,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각각 4.8%,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하엘 글로스(Micahel Glos) 연방경제부장관 장관은 현재보다 유가가 하락되고 세계경기가 호전되거나 연방정부의 경제성장프로그램 추진이 강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2%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만은 단지 소폭의 인상만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7%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7.25%에서 6.1%까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국민소득 중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Lohnquote)은 6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 연방경제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6 연간경제보고서

(<http://www.bmwi.de/Navigation/Service/bestellservice,did=106824.html>)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Frankfurter Allgemeine) 2006.1.25.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ür Glos”

(<http://www.faz.net/s/Rub050436A85B3A4C64819D7E1B05B60928/Doc~E7BB8CEEE963B4743AFE8A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를 주로 참조하여 정리함.

2) 2005년도 경제 관련 최종 통계 결과는 오는 2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3) 정부의 공공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슈피겔(Spiegel) 온라인 2006.1.9.기사 참조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394312,00.html>).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의 대폭 증가에 비해 근로자임금소득은 소폭으로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결국 소득분배를 임금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⁴⁾

또한 2006년의 고용인구수는 계속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1.7%에서 10.9%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방고용청 집계에 의하면 2005년말 기준 실업자 수는 약 4백6십만4천명이었는데 2006년 1월에는 이보다 4십만8천명이 증가된 5백만2천명이다. 하르츠IV법을 발효에 의해 새로운 실업수당II와 복지제도 시행이 시작되었던 지난 2005년 1월에 5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집계된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5백만명을 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실업률 11.1%에서 1월 실업률은 12.1%로 상승되었다. 동·서부 지역간 격차도 여전히 구동독지역 실업률은 19.2%, 구서독지역 실업률은 10.2%로 집계되었다.

연방노동청 바이제(Weise)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실업률 감소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피력하였다. 1월의 높은 실업률은 동절기 특성상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특히 금년 1월에는 고령노동자들이 기존 제도에 의한 장기간의 실업수당I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실업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55세이상 고령 노동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최고 36개월 동안 지급되었던 실업수당이 2월부터는 최고 18개월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1월에 서둘러 실업자로 등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⁵⁾

2006 경제보고서에는 정부의 경제, 재정, 조세, 노동, 고용, 사회복지, 교육, 연구, 기술, 에너지, 환경,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유럽 및 국제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글로스 장관은 경제보고서에서 “개혁, 투자, 독일의 보다 많은 노동을 위해 미래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신뢰에 가득찬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회생, 개혁, 투자의 조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는 양질의 근로자들, 경쟁력 있는 기업, 사회적 평화와 같은 기반의 강화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 개혁정책의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의 하르츠개혁을 유지하면서 개선시켜나간다는 것이다.

4)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2006.1.25. 온라인기사
(http://www.fr-aktuell.de/fr_home/startseite/?cnt=794252).

5) 슈테른(Stem) 2006.1.31. 온라인기사(<http://www.stem.de/sonst/index.html?id=554649&nv=rss>).

경영계의 전망과 입장

경제연구소 IFO의 2006년 경기전망 역시 상당히 낙관적이다. 다른 경제전문기관들도 대체적으로 1.5% 내지 1.7%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⁶⁾

IFO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환경지수(Business Climate Index)는 지난 12월의 99.7에 비해 올해 1월에는 102로 올랐는데 이는 2000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⁷⁾ 동 지수는 독일의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상황이 좀더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선호하는 보수성향의 기독교민주당 메르켈 당수의 집권과 최근 수출 증가추세 등이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1999년 이래 해마다 100명이상 고용 기업의 탐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즈니스 모니터(Business-Monitor)”⁸⁾ 결과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53%는 2006년에 자사의 직원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답하였고 20%의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면 26%의 기업들은 신규고용으로 직원수를 늘릴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감축보다 신규고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다소 많게 나타난 것은 2001년 초에 실시된 조사 이후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라고 한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5% 이상 될 때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에서 1.7%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경제학 이론이 실제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 노동시장과직업연구소(IAB) 자료 참조(http://doku.iab.de/werkber/2006/wb_prognosen.pdf).

7) IFO홈페이지 참조

(http://www.cesifo-group.de/portal/page?_pageid=36,34759&_dad=portal&_schema=PORTAL).

8) 올해는 2006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00명이상 고용기업의 탐 매니저급 직원 79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내용은 한델스블라트 200.1.30. 온라인 기사 참조

(<http://www.handelsblatt.com/pshb/fn/rehbi/sfn/buildhbi/cn/GoArt!200013,203492,1026561/SH/0/depot/0/index.html>).



한편 정부의 경제, 노동정책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은 정부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사용자연합회장인 디터 훈트(Dieter Hundt)씨는 정부의 정책에는 개념(Konzept)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현행보다 3%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임원을 맡고 있는 마르틴 반스레벤(Martin Wansleben)씨 역시 구조적인 예산부족을 세금인상에 의해 메꾸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하였다.⁹⁾

노동계의 전망과 입장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전망에 대해 비판적, 회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4%의 경제성장률은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일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였다. 즉, 정부의 현재 경기회복정책만으로는 미흡하고 특히 교육, 연구 분야에는 최소한 200억유로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투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을 위한 시동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실질소득의 저하는 소비위축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¹⁰⁾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의 프랑크 브시르스케(Frank Bsirske) 의장은 1월의 5백만명이 넘는 실업자 수 통계는 정부 정책의 좌초와 결국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포기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좌파정당(Linkspartei)의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 원내교섭단체장

9)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 2006.1.25.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ür Glos”

(<http://www.faz.net/s/Rub050436A85B3A4C64819D7E1B05B60928/Doc~E7BB8CEEE963B4743AFE8A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

10) DGB 보도자료 참조

(http://www.dgb.de/presse/pressemeldungen/pmdb/pressemeldung_single?pmid=2710).

역시 수많은 고령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높이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¹⁾

■ 노사관계 전망

노동조합 현황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2005년 독일노동조합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조합원감소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6,778,638명이고 조합원감소비율은 3.3%이다. 2004년말 전체 조합원수는 7,013,037명이었다. 조합원감소비율이 2004년에는 4.8%, 2003년에는 4.4%였던 것에 비하면 조합원수 감소 추세가 약간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²⁾

한편 독일 단위노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와 금속노조 이계메탈(IG Metall)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2004년에 비해 감소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다. 베르디의 경우 조합원감소비율은 4.27%인데 이는 2004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서 2005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2,359,392명이다. 2004년 조합원수는 2,464,510명이었다. 이계메탈의 경우 2005년말 현재 조합원총수는 2,376,225명이고 조합원 감소비율은 2.0%이다. 2004년 조합원총수는 2,425,005명이었다.¹³⁾ 이로써 이계메탈은 베르디를 제치고 단위노조로서 최대규모의 노조자리를 탈환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에 이계메탈 소속 사업장인 자동차회사, 예컨대 다임러 크라이슬러사 같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인원감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

11) 현재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이는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계와 좌파정당 측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은 단지 연금재원을 절약하기 위해 고령노동자들을 좀더 장기간 실업자 상태로 방지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디 벨트(Die Welt) 2006.1.31. 온라인 기사(<http://www.welt.de/data/2006/01/31/839195.html>)).

12) DGB자료 참조(http://www.dgb.de/homepage_kurztexte/mitglieder.htm).

13) DGB 발간 잡지 아인블릭(Einblick) 2006년 2호(<http://www.einblick.dgb.de>).

입한 것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단체협상, 노동쟁의 관련 현황 및 전망

연초 독일 노동계는 임금협상, 고용보장 및 근로시간 연장 문제 등으로 노사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게메탈은 금속 및 전자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 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월 8일부터 헛센주, 라인란트팔츠주 및 자알란트주에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이미 5% 임금인상 요구는 지나친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베르디의 경우, 공공부문 사용자측의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연장 요구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이미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 찬반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르디 측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지 경고파업이 아닌 근로시간 연장 없는 일자리 사수를 위한 무기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베르디는 도이체텔레콤이 발표한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협상중에 있는데 도이체텔레콤 소속 조합원, 직원 등은 감원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¹⁵⁾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개혁정책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기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분배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⁶⁾ 예컨대 독일산업연합(BDI)의 위르겐(Jürgen)회장은 경제회복을 위해 신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만으로는

14) 이게메탈 보도자료(<http://www.igmetall.de/pressdienst/2005/027.html>).

15) 베르디 홈페이지(www.verdi.de) 및 한델스블라트 2006.1.28.온라인기사

(<http://www.handelsblatt.com/pshb/fn/rehbi/sfn/buildhbi/cn/GoArt!200013,200050,1025633/SH/0/depot/0/index.html>).

16)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호어스트 쾰러(Horst Köhler) 독일연방대통령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사회의 빈부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도 기업이윤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슈테른 2005.12.29. 온라인기사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552133.html?q=Köhler>).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특히 사업장단위의 노동협정(betriebliche Bündnis für Arbeit : 사업장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노사협정으로서 주로 임금삭감, 근로시간연장, 기타의 유연화조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내용의 합의)을 협약당사자들이 다룰 사항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는 사업장단위의 노동협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⁷⁾

요컨대 기본적인 개혁 필요성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사업장폐쇄 또는 인원감축 계획, 노동시간 연장, 기타 근로조건의 유연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노동현장과 단체협상 등에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연초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영계는 지속적인 수출 및 내수 증가 등을 예상하면서 대체적으로 경기 및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2006년을 시작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부가 말하는 실업률 감소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과 유연화를 원하는 경영계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차이는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LI**

17)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 2006.1.25. 온라인기사 “Jahreswirtschaftsbericht – Lob und Kritik für Glos”
(<http://www.faz.net/s/Rub050436A85B3A4C64819D7E1B05B60928/Doc~E7BB8CEEE963B4743AFE8ACF2CBC3D134~ATpl~Ecommon~Scontent.html#top>).